

2022년부터 약학대 학제 개편... 약대낭인 막는다

# 편입 대신 신입생... '통합 6년제'

**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  
편입학·신입학 방안 나와  
상반기 중 법령 개정하면  
4년 후부터 신입생 선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윌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약학대학 학제개편 공청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까지 약학대학에 입학하려면 일반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뒤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방법 뿐이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약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편입학 제도가 자연계열 학생들을 '약대 낭인'으로 내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1일 서울교육대 에듀윌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약대 학제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고 편입 방식인 '2+4년제'와 신입 방식인 '통합 6년제'의 약대 학생 선발 병행 체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대학들이 자율로 두 가지 신입생 선발방식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약대 학제는 과거 수업연한 4년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현행 수업연한 6년의 편입생 선발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돼 왔다.

6년제 편입은 일반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뒤 약대 3학년으로 진학하는 방식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약대로의 이탈, 약대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통합 6년제로 개편 하자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는 '약대 학제 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주제의 발표를 통해 "매년 약대 신입생 1800여 명 중 화학, 생물계열이 1100여명을 차지하고 이런 현상이 10년 동안 지속될 경우 1만 명 이상의 기초과학 인력이 유출됨에 따

른 이공계 등 기초학문 황폐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약대 편입생 중 2학년 이후 공백없이 바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8.7%에 불과하고 2년 이상 경과 후 진학하는 학생이 66%에 이르는 등 약대편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병행하는 이유로는 통합 6년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의 어려움이 있는 대학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이화여대 교육학과 한유경 교수의 진행으로, 성균관대 약학과 이의경 교수, 아주대 의대 임기영 교수, 이화여대 화학나노학과 김성진 교수 등 관련 전문가 6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약학과와 의학과 등 대다수 토론자들은 통합6년제 신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기존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김성진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매년 약대 편입생원의 10배 정도인 1만5000명 정도의 이공계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한 채 사설학원을 전전하면서 2년 이상씩 PEET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대학들이 현행 2+4년제와 통합6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온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현행 2+4년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의 확대 등 선택권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병행 체제의 경우는 2개 학제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고 학제에 따른 학습 수준 편차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통합6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기영 아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자가 제안한 대학별 자율선택안은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 6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 6년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안은 KEDI 서인영 박사의 정책 연구와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번 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고려해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을 확정된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유지상 광운대 총장 취임 "ICT 명문대로"

유지상 광운대 신입총장이 1일 교내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총장 업무에 돌입했다. 유 총장은 취임식에서 광운대를 ICT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스마트한 변혁의 리더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동참해 광운대가 ICT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전략과 지역중심 발전전략인 '글로벌 멀티-유니버시티'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역량교육 시스템의 재정비 ▲신개념 복지서비스의 실현 ▲효율적 산학협력 시스템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멀티'의 개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결속도 강조했다. 유 총장은 "모든 정책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소통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중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젊고 혁신적인 총장이 광운대의



유지상 광운대 제10대 총장이 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광운대

웅비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공감의 장을 만들어 구성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는 광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유 총장은 총임과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공학 석사,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처장, 정보과학교육원장을 거쳐 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 위원, 차세대방송기술협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문교수, K-쇼핑 시청자위원, ETRI저널 세션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용수 기자

## 동국대 고교생도 수강하는 '경기꿈의대학'

경기도교육청과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31일 오후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꿈의대학은 경기도교육청 소재 고교 재학생이 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특별 개설 강좌를 듣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경기꿈의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한태식 동국대 총장(왼쪽)과 이재연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

및 정보 교환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태식 동국대 총장은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는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경기지역 고교생들에게 진로와 진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35개 공공기관 채용 스타트... "취준생 주목"

신입 정규직 중 68% 이달 채용  
공공기관 평균 초임 3514만원  
수출입은행 4525만원으로 1위

35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신입직원 채용을 시작한다. 올해 중 신입 정규직 채용은 10명 중 약 7명을 2월에 선발한다.

1일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35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 정규직 1365명의 68%에 달하는 908명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2월 중 마감할 예정이다. 채용형 인턴 등 1052명 가운데 약 절반인 426명도 이달 중 채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82명 규모로 신규 채용을 실시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110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1명)

등의 기관에서 000명 단위의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52명) ▲한국가스안전공사(44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0명) 등 21개 기관에서는 00명 단위 채용을 진행한다. 이들 기관에서 올해 통틀어 채용하는 신입 정규직은 1365명으로, 그 중 이 달에만 908명의 채용이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진행한 신규 채용은 물론, 현재 선발 중에 있는 인턴 채용 180명에 더해 이달 내 체험형 인턴까지 26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수출입은행(100명) ▲중소기업진흥공단(50명·2월과 7월 채용 합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0명·2월과 4월 채용 합산) ▲한국정보화진흥원(15명)에서도 2월 중 체험형 인턴을 선발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21명의 채용형 인턴을 모집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들 35개 기관의 평균 초임은 351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4525만7000원으로 초임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451만3000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324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300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초임 수준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공공기관 구직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들 기관의 정규직 신입채용이 2월 중 많이 풀려있는 만큼, 희망 구직자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를 면밀히 참고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 "할인된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준비하세요"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2월1일부터 14일까지 할인율을 5%에서 10%까지 확대

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할인규모는 전체적으로 2500억원 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



북·광주은행에서 취급한다. 한편 중기부는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 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 '설맞이 그랜드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유숙박 플랫폼 소비자 불만접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유형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	불완전계약이행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기타*	계
건수(비율)	137(70.6)	34(17.5)	12(6.2)	11(5.7)	194(100.0)

\*불실·도난·안전 등.

/한국소비자원

## 공유숙박 소비자 불만 급증... '위약금 주의보'

소비자원 4년 간 불만건수 3배 늘어  
숙박료 전액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도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을 유상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4~2017) 접수된 총 194건의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108건)가 2016년(36건) 대비 3배나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접수는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는 일본(56건·43.1%)이 가장 많았다. 미국(21건·16.2%), 독일(7건·5.4%), 프랑스(6건·4.6%)가 뒤를 이었다. 국내는 제주(23건·35.9%), 부산(10건·15.6%), 서울(8건·12.5%)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만', '엄격' 등으로 구분된다.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한 뒤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김원진 기자 ujin6326@